

2018-19 인도 연방정부예산안과 산업별 영향

김용식 수석연구원, 글로벌연구센터 (sendmail@posri.re.kr)

목차

1. 2018-19 인도 연방정부예산안의 의의
2. 2018-19 인도 연방정부예산안의 특징과 내용
3. 산업별 영향
4. 시사점

Executive Summary

- **모디 정부는 지난 2월 1일 의회에서 2018-19 연방정부예산안을 발표**
 - 동 예산안은 1년간의 경제 정책 목표와 주요 추진 방향, 산업 정책 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
 - 모디 정부의 마지막 예산안으로, 총선이 치러지는 2019년에는 중간예산을 발표하고 집권 정당이 다시 확정 계획안을 발표할 예정
- **2018-19 예산안은 2019 총선 대비용 포퓰리즘이 강조된 예산안**
 - 2019년 총선 승리를 위한 표심 확보를 목표로 농촌 개발과 농민 지원, 빈곤층 복지 예산 증액, 시니어 계층 이자 소득세 감면 등 선심성 예산을 확대
 - 지출은 전년 대비 10%가 증가한 24.42 조 루피이며 인프라 투자가 약 6 조 루피로 24.4%를 차지. 한편 조세수입은 14.6%가 증가한 17.26 조 루피
 - 이번 예산안이 선심성 예산으로 채워지고 구체적 개혁정책도 포함되지 않자 인도 주식시장은 2009년 이후 최대 하락폭을 보이는 등 실망감 표출
- **인프라 확대와 농촌 개발, 주택 건설 등으로 건설과 시멘트산업에 가장 긍정적 영향이 예상됨. 철강도 수요산업 증가로 긍정적 효과 기대**
 - 고속도로, 철도 투자 확대와 빈곤가구 주택공급 등 6조 루피의 프로젝트 실행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건설산업과 시멘트산업에 가장 긍정적 영향
 - 자동차는 차종별로 파급영향이 상이. 농가소득 증가로 소형 승용차, 이륜차, 트랙터는 긍정적인 반면 CKD 수입 관세 증가로 고급자동차는 부정적.
 - 철강은 인프라 투자와 자동차 생산 증가에 따른 수요증가는 긍정적이지만 업체들이 요구하였던 원재료 수입 관세인하는 받아들여지지 않음
 - Make in India 실행을 위한 중간재 부품의 수입관세율 증가는 인도 시장 내 생산기지 구축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을 시사
- **우리 기업들도 2018-19 예산안에서 강조하고 있는 인프라 투자 확대와 농촌 개발, 산업별 정책을 분석하여 사업기회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음**
- **한국 기업들간의 공동 사업이나 현지업체와의 협력전략을 추진함으로써 리스크 감소와 시장지식을 축적하고, 이후 점진적으로 확장하는 전략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음**

1. 2018-19 인도 연방정부예산안의 의의와 특징

□ 연방정부예산안(Union Budget)은 1년 경제정책의 기본 Road Map을 제시하므로 산업 정책 방향과 파급 영향 등을 파악할 수 있음

○ 연방정부예산안(Union Budget)의 의의

- 예산안은 1년간의 경제 정책 목표와 주요 추진 방향, 산업 성장정책, 사회 발전 및 성장을 위한 복지 정책 등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
- 2018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1년간 정부의 수입과 지출 내역 등이 포함되며 작년부터 철도청 예산도 포함하여 발표

○ 산업 정책 방향과 파급 영향 및 그에 따른 사업기회 분석이 가능

- 금번 예산안의 특징과 정부의 부문별 지출 방향, 거시경제 목표, 복지 정책 등을 분석함으로써, 산업 정책에 따른 업종별 긍정·부정적 영향 분석을 통해 향후 추진 가능한 사업 기회 등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음

○ 2018-19 연방정부예산안(Union Budget 2018-19)의 특징

- 2019년 4~5월에 개최되는 총선을 앞두고 출범 4년 차인 모디 정부가 발표하는 마지막 예산안임
- 경제성장을 모토로 정권을 잡은 모디 정부가 성장과 재정적자 안정을 추진할 지 선거 승리를 위한 포퓰리즘을 강화할 것인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

2. 2018-19 인도 연방정부예산안의 특징과 내용

□ 2019년 총선을 의식한 포퓰리즘이 강조된 예산안

○ 농심(農心) 확보를 위한 농가 지원책 확대

- 전체 인구의 60% 이상을 차지하는 농민들의 부채 증가, 농작물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불만 감소를 위한 농가 지원책 집중 발표
- 농작물 최저수매가격(MSP: Minimum Support Price)을 생산원가의 50%를 초과하는 선에서 결정. 정부 직접 구매나 시장가격과 MSP 간 차액 보상 등 직접 혜택이 가도록 조정하며 농민 마음 잡기에 주력

- 농가소득 증대 방안으로 양파·감자·토마토 등의 가격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'Operation Greens' 도입. 농민생산자협회의 창설과 유통 효율성 제고, 가공 설비와 전문관리방안 등을 연계하여 가격 안정을 목표로 함

○ 빈곤층 대상 복지 예산 확대

- 경제적으로 취약한 1억 가구에 연간 500천 루피(약 845만원)의 병원 치료비 지원. 약 5억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
- 불가촉천민(지정카스트와 지정 부족) 대상 복지예산으로 전년대비 12.4% 증가한 9,575.4억 루피를 배정하였으며 교육기회 확대에 중점을 두었음

○ 시니어 계층에 대한 이자소득세 감면, 세금공제 한도 확대

- 은행과 우체국 고정예금에 대한 이자소득 면세 기준을 1만 루피에서 5만 루피로 인상
- 질병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출 시 세금 공제 한도액을 과거 6만 루피(80세 이상은 8만 루피)에서 10만 루피까지 확대

○ 중소기업 대상 법인세 인하로 영세상인들의 불만 감소 유도

- 연 매출 25억 루피 미만 중소기업체(MSME, 납세기업의 99%를 점유)의 기본법인세율을 30%에서 25%로 인하. 약 700억 루피의 세수감소 예상에도 불구하고 경제활성화와 표심 확보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
- MSME 대상 신용융자금으로 379.4억 루피를 배정하였고 신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급여의 12%를 3년간 보조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유도

○ 포퓰리즘 예산안 발표 후 주식시장은 부정적 반응 시사

- 예산안 발표 후 주식 시장은 2.3%가 하락하면서 2009년 이후 최악의 성적을 기록
- 농촌 개발 등 투자 확대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자 확대와 장기자본이득세 도입 등 자본시장의 위험이 반영된 결과

□ 정부 지출은 10%가 증가한 24.42조 루피

○ 인프라 투자에 가장 많은 예산 투자

- 인프라 투자비는 5.97조 루피로 전년 대비 21%를 증액 (총 지출의 24.4% 차지)
- 일반 국도와 고속도로, 철도 등 인프라 개발에 투자하여 경제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도 창출하겠다는 방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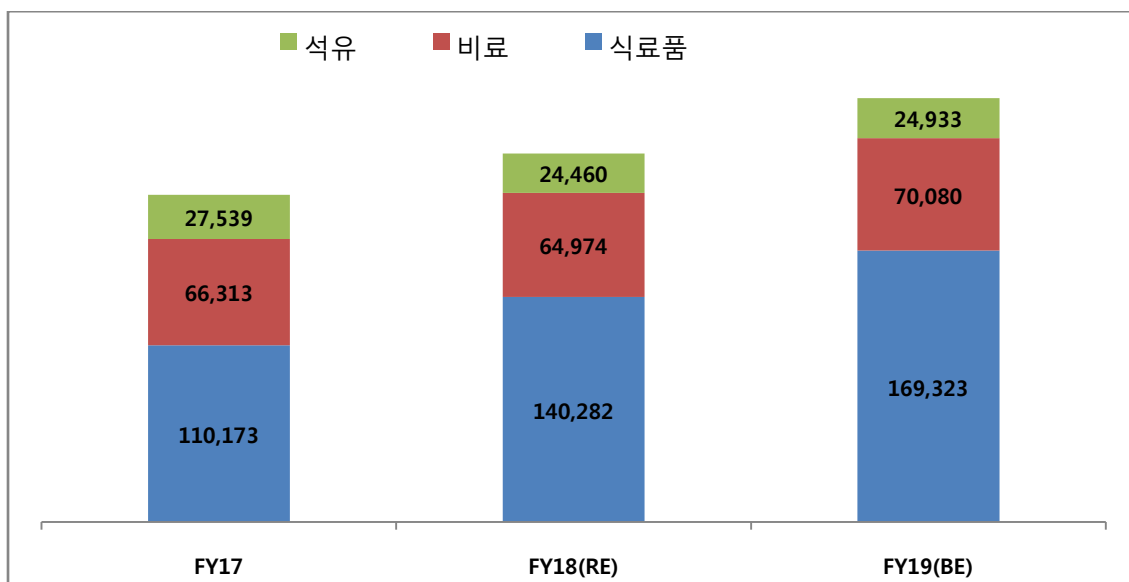
○ 농촌 생계수단 창조와 농촌 인프라 개발을 위해 1.43조 루피 투자

- 농촌 지역 인프라 개발과 고용 창출 및 생계수단 창조 등 목적
- 농촌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주택 공급(510만 가구), 전기 연결, 도로 건설(317,000km), 화장실 건축(1880만개) 등으로 고용 창출에 기여

○ 빈곤층 대상 직접 보조금은 10.9%를 증액

- 식료품(쌀 등 식용곡물), 비료, 석유 보조금(LPG Cylinder, 등유)은 10.9%를 증액한 2.93조 루피로 빈곤층의 생계수단 지원 목적
- 화폐개혁, 경기둔화, 일자리 창출 실패 등으로 인한 빈곤층 불만을 감소시키기 위한 선심성 예산으로 표심 확보가 목적

<연도별 석유, 비료, 식료품 보조금 지급 추이(천만 루피)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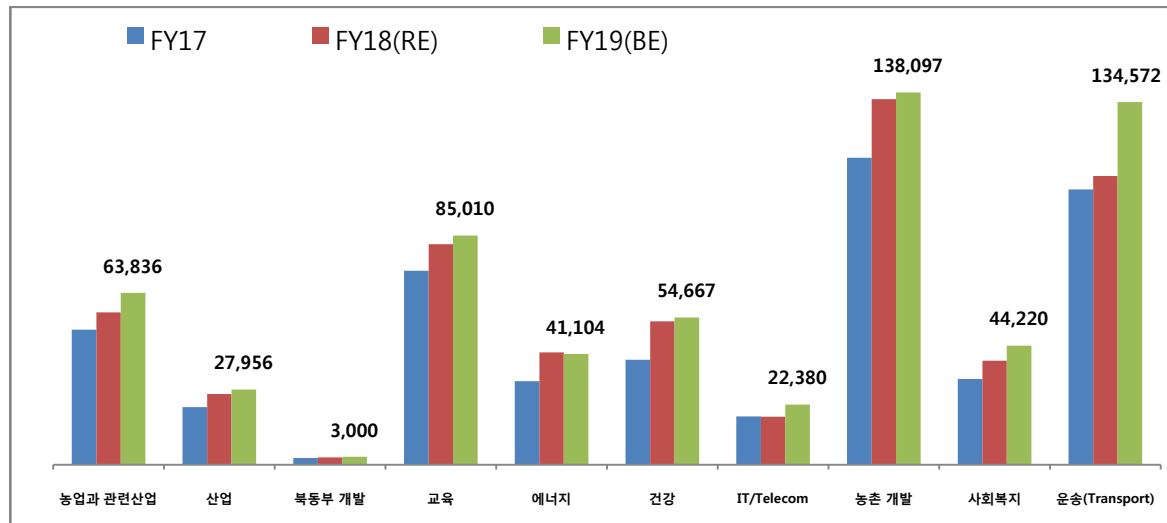


자료: 인도재무부, Union Budget 2018-19, 기타 보조금은 제외하였음

○ 농업 및 관련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는 12.8% 증가한 6,384억 루피

- 식품 가공산업 부문은 전년도 2배인 140억 루피를, 어업과 축산업 인프라 개발에도 1,000억 루피의 투자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할 계획임
- 농작물 판매 활성화를 위한 농촌마케팅 인프라 개발기금으로 200억 루피를 조성하는 등 농림수산업 발전을 위한 지출을 확대
- 농민들과 상인들의 직거래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상인들과의 상호연계성 강화를 위한 농촌 인프라 개발을 위해 1,434억 루피 배정

<주요 부문별 지출 목표(천만 루피)>



자료: 인도재무부, Union Budget 2018-19

<예산안: 수입, 지출 개요(천만 루피, %)>

	2016-17	2017-18(RE)	2018-19(BE)	증감률(%)
경상수입	1,374,203	1,505,428	1,725,738	14.6
조세 수입	1,101,372	1,269,454	1,480,649	16.6
비조세 수입	272,831	235,974	245,089	3.9
자본수입	600,991	712,322	716,475	0.6
융자회수	17,630	17,473	12,199	△30.2
공기업주식 매각	47,743	100,000	80,000	△20.0
차입/기타 채무	535,618	594,849	624,276	4.9
총수입	1,975,194	2,217,750	2,442,213	10.1
총지출	1,975,194	2,217,750	2,442,213	10.1
수입지출	1,690,584	1,944,305	2,141,772	10.2
자본계정	284,610	273,445	300,441	9.9
재정적자	535,618	594,849	624,276	4.9

자료: 인도재무부, Union Budget 2018-19

□ 정부 수입도 10% 증가한 24.42조 루피

○ 조세수입은 16.6% 증가한 14.81조 루피를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

- 7% 중반의 경제성장률과 GST정착 및 세수원 확대 등으로 전년보다 16.6%가 증가한 14.8조 루피를 책정

- 이자소득, 공기업과 중앙은행 배당, 대외보조금 수수 등으로 구성된 비조세수입은 3.9%가 증가한 2.45조 루피

○ 부족한 재원은 공기업 매각을 통해 수입 조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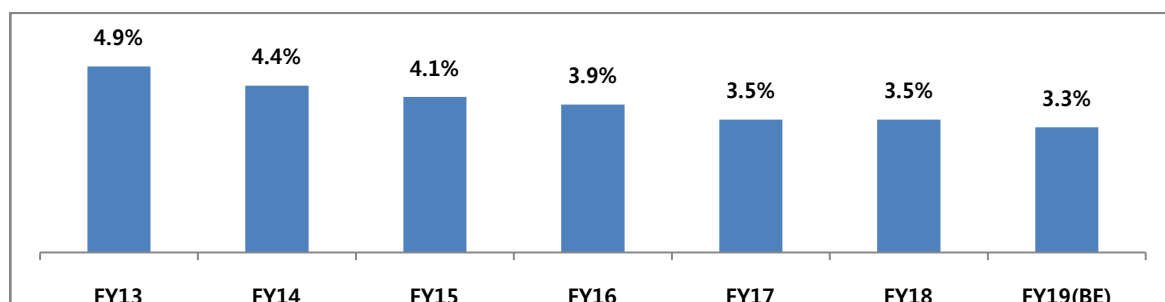
- 부족한 재원은 정부가 보유한 국유기업의 주식을 매각하여 충당할 계획이며, 이를 위해 금년도 8,000억 루피를 책정
- 전년도는 주식 시장 활황으로 사상 최고인 1조 루피를 확보. 전략적 지분 매각(투자기관들 대상의 Bulk 매각방법) 목표 미달에도 불구하고 증시 활황으로 매각 금액은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음

□ 정부 지출 증가로 재정적자 건전화 3.0% 달성 시점 3년 연기

○ 정부 주도 투자확대로 재정적자 폭 확대 불가피

- 모디 정부는 '국가신용등급 회복과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한 주요 정책 목표'의 일환으로 2017년 3월말까지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3%로 줄이겠다고 공표한 바 있음
- 민간투자감소 보완책으로 정부투자가 증가하면서 재정적자가 확대됨에 따라 재정적자 감축(GDP 대비 3%) 목표 달성은 당초 계획보다 3년 늦은 2020년에나 가능

〈정부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추이〉



자료: 인도재무부, Union Budget 2018-19

○ 모디 케어, 농가 지원 확대 등으로 재정적자 추가 확대 가능성도 대두

- 5억 명을 대상으로 연간 50만 루피의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연간 U\$17.1억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추가 부담
- 주 정부의 농가부채탕감 정책 등으로 인한 주정부의 부채 증가와 중앙 정부의 적자 증가는 향후 재정정책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

3. 산업별 영향

□ 자동차 업체: 일반 승용차, 이륜차에 긍정적 영향, 고급차는 부정적

- 농촌/농가 지원 확대, 도로 및 인프라 투자 확대로 일반 승용차와 상업용 차량 소비 증가 기대
 - 농촌발전과 농가소득 증대 방안 실행으로 가처분소득이 증가하여 Utility Vehicle과 소형 승용차, 이륜차 및 트랙터 등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
 - 농촌 인프라와 도로 건설 확대 등 투자 확대로 건설 수요가 증가할 경우 상업용 차량 수요도 증가할 것임
- CKD 수입 관세 5% 인상으로 업체들의 인도 생산 비중 증가 유도
 - 승용차와 이륜차의 국내생산을 위한 부품과 중간재 수입(CKD) 관세율을 10%에서 15%로 인상
 - 자동차 업체들의 국내생산 기지 구축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것

□ 철강: 수요 기반 확대는 긍정적, 원재료 수입 관세 유지는 실망

- 약 6조 가량의 인프라 투자와 인도 제조업 성장을 위한 투자 확대 등으로 안정적 수요 증가가 가능한 것은 긍정적
 - 5.97조 루피의 인프라 투자, 스마트 시티 프로그램 추진과 철도, 공항 개발 및 주택공급 확대 등으로 조강류 중심의 수요 증가 기대
 - 철강 수요의 60% 가량을 점하고 있는 건설과 인프라 부문 투자 확대는 조강류 중심의 빠른 성장을 가져올 것임
 - 농가소득 증가로 인한 자동차 수요 증가와 부품 조립 산업 성장 정책 등은 판재류와 특수강 중심의 장기 수요 증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
- 한편, 철광석과 니켈 등 핵심 원자재의 수입관세 유지는 부정적
 - 생산원가의 60~70%를 점하고 있는 철광석 수입 관세 인하 요구가 충족되지 않은 것에 인도 철강업계는 실망감을 표출
 - STS 업계 역시 Ferro-Nickel 수입과 고철 수입에 부과되는 2.5% 관세 폐지를 요청하였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음

□ 건설과 시멘트 산업은 인프라 투자, 공항 건설, 주택, 도로 건설 등으로 가장 긍정적

- 건설: 공항 확대, 인프라 투자와 주택공급 확대 등으로 수요 증가
 - 증가하고 있는 항공수요 충족을 위한 기존 공항 처리능력을 5배 확대하는 프로젝트와 신규 공항 추가건설 등으로 건설 산업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
 - 특히, 99개 스마트 도시 개발과 Bharatmala Pariyojana 계획 아래 추진되고 있는 35,000km 도로 건설이 본격화될 경우 고성장 지속 전망
- 시멘트: 인프라 투자 확대와 주택공급 확대 추진으로 수요 증가 전망
 - 시멘트 수요의 60~65%는 주택건설 부문임. 모디 정부의 전체 빈곤층 가구 대상 주택 공급 프로그램 추진 등이 수요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
 - 2,000만 개의 화장실 건설, 880만 채의 주택 건설 등과 각종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가 본격화될 경우 시멘트 산업의 고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

□ 인프라 확대, 부품 수입관세 인상으로 휴대폰 제조업체는 긍정적

- 휴대폰 제조업체는 완제품 수입과 부품 수입의 관세율을 기존 15%에서 20%로 인상하는 등 국내 제조 기반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긍정적 영향
 - 휴대폰 국내제조(Make in India) 활성화 방안으로 완제품과 부품 및 관련 액세서리 수입 관세를 5%씩 인상
 - 스마트폰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샤오미·오포·비보 등 조립업체들은 생산원가 상승 대응방안으로 인도 생산 계획을 앞당길 것으로 전망

□ 섬유 부문은 긍정적이며 제약과 발전 산업은 중립적

- 비단직물 수입관세 100% 인상과 수출장려기금 12% 확대로 섬유산업은 긍정적
 - 섬유산업 지원 기금이 전년도 600억 루피에서 12% 증가한 714.8억 루피로 증액되어 섬유업계의 생산과 수출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. 또한 비단직물(silk fabric)의 수입관세 인상(10%에서 20%)은 긍정적
 - 한편 최저수매가격 인상으로 인한 면화구매 가격 증가로 생산원가 상승은 업체들에게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

○ 제약산업은 직접적인 정책 지원 발표 없어 중립적

- 제약과 의료산업발전을 위한 지원 정책 등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모디 케어 실행으로 간접적 수요 증가 기대감 고조
- 결핵환자 치료 기간 동안 월 500루피 지원(총 60억 루피), 빈곤층 1억 가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은 간접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

○ 발전 산업 중 송배전 부문은 긍정적이지만 전통 발전 부문은 중립적

- 8,000만 농촌 가구에 전기 공급을 완료하기 위한 1.600억 루피 투자 발표로 전력 송배전 부문과 발전 장비 부문은 긍정적
- 화력발전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설비가동률 증가는 다소 긍정적이지만 환경 오염 규제와 신재생에너지 비중 증가계획으로 장기 전망은 흐림

4. 시사점

□ 2018-19 예산안은 2019년 선거 대비용 포퓰리즘 예산

○ 2019년 총선에서 단독정부 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모디 정부가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선심성 예산

- 주 유권자인 농민, 청년, 빈곤층 인구의 불만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불만 완화없이 재집권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
- 강력한 리더십과 개성이 뚜렷한 모디 총리는 연정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단독 집권이 가능한 과반 이상의 표 확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예산이라 할 수 있음

□ 인도 정부의 인프라 투자에서 발생하는 사업기회 포착과 부품산업 성장 기회 모색이 가능

○ 건설, 전력 송배전, 자동차, 가전, 부품산업 등에서 신규사업 기회 발굴

- 도로, 공항, 철도 프로젝트 사업과 농촌개발과 연관된 농기계, 관개수로, 건설, 전력 송배전 부문의 사업 기회 확대 예상
- Make in India 정책 부응과 중간재 관세율 인상에 따른 자동차, 가전제품, 휴대폰 부품산업 기회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

- **Make in India 및 산업보호정책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현지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인도 경제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회 포착**
 - 중간재 부품 관세율 인상, Make in India 기반 구축을 위한 인도 산업 보호 정책 등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방안으로 현지 생산기반의 구축과 확대 필요
 - 건설, 에너지 등 사업기회가 많은 분야의 시장 공략을 위해서는 한국 기업들이 공동으로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시너지 창출 및 경쟁력 강화를 모색할 필요
- **리스크 감소와 시장 지식 축적을 위해 현지업체와의 협력전략 추진**
 - 현지 네트워크 활용과 리스크 감소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으로 현지업체와 협력전략도 고려해야 함. 현지 사업기회 모색과 파트너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. 필요 시 유망한 중소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음
 - 신(新)산업에 진출할 경우 먼저 소규모로 진입하고, 이후 경험과 지식축적을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규모를 확대하고 범위를 넓혀가는 것도 좋은 대안임

이 자료에 나타난 내용은 포스코경영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.

[참고자료]

[보고서]

CARE Ratings Limited, “Analysis of Union Budget 2018-19”, 2018

Ministry of Finance, “Union Budget 2018-19”

[언론]

Bailay Rasul & Anand Shambhavi, “Duty hike may not boost Make in India: Industry”, The Economic Times, 2018년 2월 3일자

Gupta, Shekhar, “Budget 2018: Imprints of a govt unsure of second term with clear majority”, Business Standard, 2018년 2월 1일자

Marlow, Iain, “Budget 2018: Here’s the list of winners and losers”, Business Standard, 2018년 2월 1일자

Modak, Samie, “Black Friday for D-Street: Worst post-Budget market performance since 2009”, Business Standard, 2018년 2월 3일자

Sharma, Mihir S., “Pre-election Budget: Sops for farm sector, seniors, health cover for poor”, Business Standard, 2018년 2월 2일자

Sharma, Yogima Seth & Arora, Rajat, “Government’s infrastructure projects, social welfare schemes may create 5 million jobs a year”, The Economic Times, 2018년 2월 3일자

Sikarwar, Deepshikha & Pandey, Vinay, “Modicare: Healthcare scheme could cost exchequer Rs 10,000 crore 1 year”, The Economic Times, 2018년 2월 3일자